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
간담회 자료(2013.12.12)

하도급정책 주요 추진내용

2013. 12. 12



공정거래위원회

〈 목 차 〉

1. 최근 하도급법 개정 및 집행 동향	1
-----------------------------	---

2. 하도급법령 주요 개정내용	3
------------------------	---

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의 부당단가인하 규정도입	3
----------------------------------	---

나. 3배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4
------------------------	---

다.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조항 신설	5
----------------------------------	---

라. 전속고발권 개편	6
-------------------	---

마. 부당특약의 금지	7
-------------------	---

바. 지급보증금 의무지급사유 등 개정	8
----------------------------	---

(1) 보증금 지급의무사유 신설	8
-------------------------	---

(2)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	9
------------------------	---

사. 대물변제 관련 절차·방법 등	9
--------------------------	---

아. 기술유용행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제재강화 등	10
-----------------------------------	----

(1) 기술유용행위 판단기준 명확화	10
---------------------------	----

(2) 기술유용행위 과징금 기준개선	11
---------------------------	----

3. 기업간 공정거래문화의 내실화	12
--------------------------	----

4. 당부 및 주의사항	14
--------------------	----

〈첨부〉 제·개정된 하도급 관련 지침 전문	15
-------------------------------	----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5
--	----

(2)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40
--	----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56
--------------------------------	----

1. 최근 하도급법 개정 및 집행 동향

가. 개정동향

□ (1차) 4.30. 개정, 11.29 시행

- 주요내용은 부당단가인하(제4조, 제11조) 관련 규정정비, 3배 손배해상제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임
-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11.29.부터 시행
 - 주요내용은 납품단가조정협의 관련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정비,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축소, 기술유행행위에 대한 범위반점수 조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등에 필요한 벌점조정 등임

□ (2차) 6.25. 개정, 2014.1.17. 시행예정

- 주요내용은 감사원장, 중기청장으로부터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것임

□ (3차) 7.2. 개정, 2014.2.14. 시행예정

- 주요 내용은 부당특약의 금지, 보증기관의 보증금지급의무사유 등의 신설, 대물변제 관련 방법·절차 마련 등임
-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0.~10.20.) 등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4.2.14. 시행예정
 - 주요내용은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 및 보증금 지급의무사유 구체화, 대물변제관련 방법·절차 등의 마련에 관한 것임

나. 법집행동향

□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실시 중(9.30.~)

- 5,000개 원사업자[제조업(4000개), 건설업(200개), 용역업(800개)] 및 95,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범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

□ 대우조선해양의 부당단가인하 건에 대해 제재조치(10.25.)

- (행위사실)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 제조위탁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
- (제재내용) 단가인하액(436억 원) 지급명령, 267억 원의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협약 평가관련 조치

- (포스코) 협약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등급취소·인센티브 소급 박탈(' 13.9.13) → 관련내용 동반위 통보(' 13.10.2) → 동반위도 공정위와 같은 결정(' 13.10.21)

구분	기존		재평가 후	
	공정위	동반위	공정위	동반위
등급	최우수	우수	등급취소	등급취소
인센티브	직권조사· 서면실태조사 2년 면제, 위원장 표창	직권조사·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박탈	박탈

- (현대모비스) 부당단가인하에 대해 과징금·시정명령(' 12.7.20) → 협약이행평가 점수 감점(10점) 및 등급하향조정(' 12.8.16) → 관련 내용 동반위 통보(' 12.8.20) → 동반위 의결(' 12.11.29)

구분	기존		재평가 후	
	공정위	동반위	공정위	동반위
등급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인센티브	미부여	서면실태조사 1년면제	-	서면실태조사 1년면제

2. 하도급법령 주요 개정내용

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의 부당단가인하 규정도입(4.30. 개정, 11.29. 시행)

- ☐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제4조제2항제8호)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신설
- ☐ 동조항의 취지는 계속적 하도급관계에서 경쟁의 심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불리하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여부의 판단은 구체적 교섭과정이나 수급사업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단가결정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간 시장상황, 가격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교섭을 거쳤는지, 가격결정 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용인정도, 가격인하분에 대한 당사자간 부담정도 등
 - ※ 국제경쟁 심화로 제품가격 하락 시 해당 제품관련 부품의 납품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하된 가격분을 원·수급사업자가 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인하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 부당단가인하가 문제됨
- ☐ 결국, 정상적 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은 아님
- ☐ 사업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단가인하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1.29.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개정 심사지침에 따른 법 위반 행위 예>

< 법 위반 행위 예시 >

- 대기업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닌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임
- 대기업이 임금인상 및 노조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위해 이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임

< 법 위반이 아닌 행위의 예시 >

-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특정 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수출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여 당해 제품에 부속되는 부품들에 한해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임(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체들과의 충분한 실질적인 협의 및 그 협의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부담의 분담이 필요함)
- 대기업이 판매 부진 제품에 대해 생산중단이 아닌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에 대해 납품업체와 충분한 교섭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행위임

나. 3배 손해배상제 확대도입(4.30. 개정, 11.29. 시행)

-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 행위들은 은밀·교묘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

* 중소기업 애로사항(2011년) : 부당단가인하(64%), 부당발주취소(47%), 부당반품(27%)

- 징벌적 손해배제 도입을 통해 거래당사자인 중소기업이 법위반에 적극 대응토록 하여 대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

- ☐ 부당단가인하(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및 부당반품(제10조)으로 확대

-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징벌적 손배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
- 기술유용·탈취와 같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하고, 배상액 결정 시 법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 등의 피해규모,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 사업자들이 법위반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단가인하·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기술유용 관련 심사지침을 제·개정하여 11.29.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음

*** <제정 심사지침에 따른 법 위반 행위 예>**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예시>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사례(14개)를 제시함

- 대기업이 제조 위탁한 물량의 일부만을 입고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판매 부진, 내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임
- 대기업이 제조위탁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계열사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임
- 대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임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 예시> 수급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한 사례(4개)를 제시함

- 대기업이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임

다.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조항 신설(4.30. 개정, 11.29. 시행)

(1) 개정배경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직접 단가협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받아 원사업자와 납품 단가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2) 주요 내용

- ☐ (발동요건) 중기조합은 일정한 규모의 원사업자*와 거래가 있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함(시행령 규정사항)

* 중견기업으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신청사유)** 원재료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것(시행령 규정사항)
 -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체결일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등
 - 하도급계약기간이 60일 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60일 경과 전이라도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조정협의 가능
 - **(신청절차·방법·효과)** 중기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해야 함
 -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대금조정 절차는 중단
 - **(협의절차)**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기조합과 단가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의기간은 30일임
 - 협의를 결렬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60일내 납품단가를 조정해서 당사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단체행동의 금지)**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와의 협의절차 결렬을 이유로 들어 납품중단을 결의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
 - 향후, 납품단가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사업자들이 단가조정과 관련하여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할 것임
 - 위 가이드라인에는 협의에 필요한 실무적·세부적인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임
- * 신청서 양식, 협의장소, 협의횟수, 원재료가격에 관한 기준화폐단위 등

라. 전속고발권 개편(6.25. 개정, 2014.1.17. 시행)

-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견제·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
 -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 고발요청권 부여

-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기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음
- 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고발권행사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고발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

마. 부당특약의 금지(7.2. 개정, 2014.2.14. 시행)

- 상당수 특약의 경우 외형상 당사자간 합의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
 -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전면 금지하고 일정한 특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약정(시행령 규정사항)
 -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등

- 위 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약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벌금 등 형벌부과 가능
-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약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바. 지급보증금 의무지급사유 등 개정

(1) 보증금 지급의무사유 신설(7.2. 개정, 2014.2.14. 시행)

- 현행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계약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법 제13조의2 제1항)
 - 그러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나 보증금 지급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급사업자 보호에 한계
 -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청구를 하면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도입
-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 ①원사업자가 금융거래 정지된 경우, ②원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③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등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일정기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 보증기간 내 하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2]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시행령 및 고시개정)

- ☐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여 수급사업자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보다 강화
 - 건설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공사범위 축소[4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신용등급 조정[회사채 등급 A- → A0(고시 개정, 11월 중 시행)]

사. 대물변제 관련 절차·방법 등(7.2. 개정, 2014.2.14. 시행)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물변제(하도급법 제17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 대물로 제공되는 아파트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 따라서, 대물변제 시 소유권, 담보제공 등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방법 등 보완
-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 전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 제시하여야 할 자료(시행령 규정사항)
 -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공부의 등본*
 - * 건물,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
 -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
 - 자료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시행령 규정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쇄자료 또는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적 파일형태로 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전송

아. 기술유행행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제재강화 등

[1] 기술유행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화(지침 개정 11.29. 시행)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행행위 심사지침 개정

- ☐ (법 적용 대상 명확화) 원 · 수급 사업자 간 기존거래와 다른 별도의 거래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행행위는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예)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와 관련된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최종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기술자료의 내용 보강) 보호대상 기술자료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실제 판례 등을 참조하여 관련 예시를 보강함

<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 · 자료’ 의 의미 구체화 및 예시 >

- 하도급 관련 제품이나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예)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원재료 성분표 등

<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 예시 추가 >

- 전체적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더라도 세부사항은 비공개 상태로서 유출되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 ·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해당됨
-

- ☐ (정당한 대가 구체화)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정당한 대가를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규정함

- ☐ (기술유행행위 사례 보완) 기술유행 사례를 거래 개시 전, 거래과정, 거래 종료 후 등 거래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거래 개시 전)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 사업자의 입찰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거래과정)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조공법을 습득한 후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거래 종료 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 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2] 기술유평행위 과징금 기준개선(시행령 개정 11,29. 시행)

- 기술유평행위의 위반행위 유형점수는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 등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범위반에 대한 충분한 제재를 하는데 한계

* 현행 기술유평행위 : 60점, 보복행위 및 탈법행위 : 100점

<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점수 산정방법 >

$\tex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 \times 0.4 + \text{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 \times 0.2 + \text{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 \times 0.2 + \text{위반전력의 부과점수(D)} \times 0.2$
--

- 기술유평행위에 대한 부과점수가 60점 → 100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술유평행위시 산정되는 과징금 점수가 높아짐

- 그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되는 바, 기술유평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 과징금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

구분	점 수 수 준					
	80~	70~80	60~70	50~60	40~50	~40
과징금 부과율	10%	9%	7%	5%	4%	3%

- 제재강화 뿐 아니라 「기술자료의 제공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14년 상반기),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제시하여 범위반 예방을 도모

3. 기업 간 공정거래문화의 내실화

가. 추진 실적

[1] 공정거래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 협약절차기준의 세분화*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분야로 공정거래협약의 수평적 확산 유도(12월 완료 예정)

* 4개(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 6개(통신업, 가맹사업 추가)

- 매출액과 관계 없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1차 협력사면 완화된 협약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의 확대(4월)

* 기존에는 연매출 5,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에만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협약평가기준(평가부담이 많은 자금·기술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평가에서 제외)을 적용

〈참고〉 협약체결기업수: ('08년) 69 → ('09년) 51 → ('10년) 73 → ('11년) 110 → ('12년) 145 → ('13년) 170여개(예정)

[2] 이행평가를 통한 실질적 상생협력 유도

-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 73개에 대한 이행평가 완료(5월)

- 이행실적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협약체결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우수기업 38개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9개 업체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29개 업체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 (협약의 양적성과) 이행평가 결과 73개사는 협약기간 중 총 9,500여개 협력사에 대해 납품단가를 상향조정하여 3,810억원을 추가지급하였고, 총 3조6,318억 원의 자금 지원을 실시

- (협약의 질적성과)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평가 결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공정거래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남

-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개선' 12년: 보통 → '13년: 양호

- 지수외 16개 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 중(12월 완료)

[3] 상호 소통을 통한 내실있는 협약제도 운영

- ☐ 4회*에 걸친 협약제도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협약제도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적극적인 협약 체결 유도

* 1.15., 4.23., 8.23(이상 3회 대기업 대상), 11.25(중견기업 대상)

- ☐ 25개 중견기업과 589개 중소기업 간 협약 선포식 및 공정거래 선언 행사를 지원(6월)
- ☐ 공정거래협약 절차기준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12월)를 통해 협약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 검토

나. 향후 계획

[1] 공정거래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의 지속 추진

- ☐ 서비스업(광고·디자인·운수업), 식품업 등 새로운 협약절차기준 신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촉진
- ☐ 기 협약체결 중견기업(36개사) 대상 최초로 협약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예정

[2] 이행평가의 신뢰성 제고

- ☐ 협약절차기준상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이행 실적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
- ☐ 이행평가 시 협력사도 방문하여 해당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교차 확인하는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 검증절차 강화

[3] 협약이행의 내실화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 ☐ 이행평가 결과 부진한 기업(평가 점수 75점 미만)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협약제도 교육과 이행방법에 대한 집약적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흡원인 해소
- ☐ 협약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13년 도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 피평가 기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

4. 당부 및 주의사항

- 올 한해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등 많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강화되었음
 - 앞으로 개정법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를 부과할 계획
 - 또한, 피해사업자로부터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여 범위반으로 인한 이득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 따라서, 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하도급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오로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에, 변경된 제도에 대해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범위반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인식전환 도모 필요
 - 오늘 참석하신 임원들께서는 제도 및 법집행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가 법준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일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함
- 한편,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감에 있어 공정거래 협약이 기업전반으로 성공적으로 확산·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공정거래협약의 성공적인 정착은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신뢰가 기반이 될 때에만 가능
 - 협약체결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협약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임
 - 강화된 제재수준으로 인하여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박탈하는 등 타격이 클 것임
 - 또한, 해당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판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공정거래협약 체결기업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공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첨부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13.11.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82호, 2013.11.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7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4조 및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용어의 정의

1.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 포함)·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수령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 1. 및 2.에서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

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Ⅲ.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의 구분 및 판단기준

1.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위 Ⅱ.(용어의 정의) 1. 내지 2.에 의하여 판단한다.

2.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3. 신규 개발품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여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Ⅳ.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해당 여부 심사기준

<법 제4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성 요건> : ①부당하게 ②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하게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운송·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 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상태의 생산량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⑨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 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⑩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⑪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로 발주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만큼을 인하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⑫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⑬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⑭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⑮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1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가 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17>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 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8>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20>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여 신규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21> 기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나.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①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③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④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⑤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3)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1) “정당한 사유” 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③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①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 등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④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⑥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나.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라.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마.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

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⑥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영 제7조 제1항)

사.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②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 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 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

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아. 법 제4조 제2항 제8호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새로이 인화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나 절차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새로이 인화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하며, 이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게 된 사정,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 인하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추후 이를 실행하였는지 여부

-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정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결국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그 부담을 수급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중단 보다는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해당 제품에 부속하는 목적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 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

위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이란 가령 원사업자가 A, B, C 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A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수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A제품에 부속되는 목적물들에 한해 단가를 인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의 경우는 이들과 직접 연관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위반 예시>

①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V.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해당 여부 심사기준

<법 제11조 제1항>: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위법성 요건>: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만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여 자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④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⑤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행위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⑨ 당초 계약과 달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⑩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제화폐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화폐로 변경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지우는 행위

⑪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후에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인상 등의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⑫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⑬ 하도급거래 기간 중에 당초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이나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16>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17> 원사업자가 철근 등 지급자재의 가공·보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제3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토록 하면서, 자재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재비 손실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 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

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③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중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나.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해당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범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범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법 제11조 제2항 제3호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지나친 감액”의 해당 여부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 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 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라. 법 제11조 제2항 제4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의 과오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즉 수급사업자의 과오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법 제11조 제2항 제5호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공제한 해당 물품·장비 등의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가 당시의 동일·유사한 물품·장비 등의 시장가격이나,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 1회차 대금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바. 법 제11조 제2항 제6호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납품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에 의한 단가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단가 등에 의하여 산출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품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감액하는 행위

사. 법 제11조 제2항 제7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②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아. 법 제11조 제2항 제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의 판단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

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VI. 유효기간

1.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3호, 2009.8.12>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 2011.6.30>

이 지침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 2013.11.27>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13.11.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81호, 2013.11.2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I.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용어의 정의

1.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건설 또는 용역의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한 후 임의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수령의 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에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 또는 인수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 1. 및 2.에서 위탁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 거래계약처럼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납품 등의 수량·단가·시기·장소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주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서 또는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생산계획 수립, 위탁 및 입고 등 일련의 과정이 전산시스템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로서 주별 또는 월별 단위의 예상물량 통보(Forecast, FO), 납품 등의 수량·단가·시기·장소 등이 기재된 발주(Purchase Order, PO), 납품 지시(Delivery Order)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PO)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다만, 가령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의 사양 변경·생산계획 변경·모델단종 등을 이유로 위탁이 중단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물 등의 종류 및 특성, 거래규모, 해당 수급사업자의 생산능력, 제조 등의 공정 및 공법, 계속적 거래계약의 내용, 거래조건의 동일성,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유지기간, 관련 산업의 특성 및 시장상황,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납품 등의 수량·단가 등이 발주(PO) 시점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본다.

Ⅲ.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부당한 위탁취소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예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①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물량의 일부만을 입고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판매부진, 내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정을 상당부분 진행한 시점(85%)에 발주자의 부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중단 통보를 하면서 상당기간(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제작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마니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양을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한 후 발주자와의 최종 협의결과 사양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변경한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①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계열사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며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중단하기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수급사업자의 작업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미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시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4>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마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선행공종인 토공사와 파일 공사가 상당기간(2개월) 지체되고 발주자의 자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체불금이 누적되어 공사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선박거주구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속 선박거주구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사급자재를 5개월 정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7>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수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원사업자가 05.1월경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동 금형을 개발완료할 경우 특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월 20만개 이상)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금형개발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6.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일부 부품만을 납품 받은 후(약 11만개, 월평균 2만2천개) 금형반납을 요구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별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한 경우

<예시 9>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0>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 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의 진행 부진,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현장 점거농성 등을 이유로 위탁을 해지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이 부진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장 농성도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공사 수행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공사계약 후 해지 시까지 경과한 기간보다 더 긴 잔여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예시 11> 수급사업자가 부도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2>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① ERP시스템을 통해 납기일 종료 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거쳐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단종,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시점인 납기일 종료 후에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한 경우
- ② 당초 정산합의서에 판넬과 가구의 납기일자를 명기하지 않았으나, 원사업자가 임의로 명기하고 날인을 강요한 후 수급사업자가 위 납기일자에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계약을 취소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취소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한 경우

<예시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자인의 작성을 위탁한 후 인사미동으로 교체되어 새로 부임한 원사업자의 담당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디자인 작성 작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변경한 경우

<예시 1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라.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의 예시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불과 며칠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해당 수급사업자가 자재협력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미지급한 금액이 원사업자와의 위탁계약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은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예시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자재·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예시 4>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령거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수령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수령”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용역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그리고 “인수”란 건설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이하 “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이하 “거부”라 한다)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2>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3> 위탁시 서면으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4>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위탁시 발주일로부터 6개월 후를 납기일로 정했으나, 원사업자가 갑자기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일로부터 1개월 후에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위 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원사업자가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6>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7>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참조 사례)

- ①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원사업자가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납기일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성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생산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당초 위탁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④ 종합건설사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설계도면의 작성을 위탁했으나, 상가 건설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설계도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⑤ 광고회사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TV광고의 제작을 위탁했으나, 광고주가 광고발주를 취소하자 원사업자가 이미 수급사업자가 TV광고를 제작하여 저장한 매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완성된 물량(ATM기의 외부케이스) 1,115대 중 326대를 공장창고의 여유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주문서의 납기일자로부터 최소 24일 또는 최대 404일 지연하여 수령한 경우

<예시 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예시 11>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12>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반품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0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0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법 제10조의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부당반품 행위의 예시

부당한 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 ①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자 이들 의류를 수급 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방송 영상물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시청률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 영상물이 기록된 매체(CD-ROM, USB, 플로피 디스크 등)를 반품한 경우

<예시 2>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완구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안전규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 없어 국내 안전규격에 맞추어 제조·납품하였는데, 원사업자가 EU 안전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고 반품한 경우

<예시 3>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단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납품한 방수외류의 방수성능이 검사기준 미만일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미들 방수외류를 반품한 경우

<예시 4>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원사업자가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하고 초콜릿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카카오 페이스트를 1.24.까지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주일 후인 2.7.에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2.10.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2.13.납품하자 납기를 준수하지 않아 초콜릿 제품의 유통·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품한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필하고 납품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다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한 경우

<예시 6>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참조 사례)

- 수급사업자가 원자재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약정물량의 1/2에 대해 납기를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양해하며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납기에 맞추어 납품하였으나 그 사이 유행이 바뀌어 완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원사업자가 당초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예시 7>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IV.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1호, 2013.11.20>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2013.11.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83호, 2013.11.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598

I.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1.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이하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이 심사지침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시 2〉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나.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다)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시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3.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제1호 본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다는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

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 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목에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라 함은 제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등

5.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에서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자료가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다른 회사의 제품개발계획, 생산계획, 판매계획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거래관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간접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4>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5>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6. 제1호 나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 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등

IV.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신제품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

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7>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계약 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8>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9>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허가나 신고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다른 부속품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외형 도면 및 수치만 필요함에도 원사업자가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 도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원사업자가 부품 승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부품 승인에 불필요한 상세 기술자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비밀준수 관련 사항,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 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동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② 정당한 대가지급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③ 기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5) 정당하게 서면을 교부한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에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자료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면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체없이 발급한 경우

<예시 3> 기본계약서, 특약서 등에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사항이 기재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여 기술요 구서를 발급한 경우

2.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 기술 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때 “정당한 대가”는 해당 기술자료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규 기술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 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 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 이전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거래단계>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3>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중

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V.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6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5호, 2011.7.6>

이 지침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 2013.11.29>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